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향

Contents

1.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2.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정책동향
3.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4.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
5.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향과 과제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진

황영모 농업농촌연구부 부연구위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C O N T E N T S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향

1.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2.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정책동향
 - (1) 사회적 경제의 이해
 - (2) 사회적 경제 정책동향
3.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 (1) 사회적 경제 조직 개황
 - (2) 사회적 경제 조직별 현황
4.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
 - (1) 고용현황
 - (2) 자본금 및 운영예산
 - (3) 주요사업
 - (4) 재료구입 및 상품/서비스 판매
 - (5) 상품/서비스 가격결정
 - (6) 상품/서비스 경쟁력 평가
 - (7) 매출액 및 순수익
 - (8) 실태분석 요약
5.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향과 과제
 - (1) 통합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의 방향 설정
 - (2) 도와 시군의 통합적 사회적 경제 정책 전달체계 정비
 - (3) 우호적 시장환경 조성 위한 사회적 책임조달 확대
 - (4) 사회적 경제 조직 연계 경제활동 조직화 사업전략 개발
 - (5) 생활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3년 4월 23일 vol.105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약

- 새정부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여 사회적 경제로의 통합적 접근과 지역단위의 대응과제 모색이 필요한 시점
-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관련 NPO를 사회적 경제의 조직실체로 파악하고 시장과 정부실패의 대체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오고 있음
- 본 이슈브리핑은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구체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대응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에는 기존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공동체조직, 농업생산자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등 약 4천여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
- 전라북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음
 - 전라북도에는 4천여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약 2.6만명이 고용되어 농산가공, 교육·문화·예술,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원재료의 89.4%를 도내에서 조달하며, 생산된 상품/서비스의 69.1%를 도내에 판매하는 등 지역순환경제를 실천하고 있음
 - 생산하는 상품/서비스는 품질·가격·사회적신뢰 등은 장점이지만 마케팅·자본력 등 인적자원 등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연간 약 1조원의 사업예산으로 운영하면서 1.8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며, 최종적으로 2,500억원 규모의 순수익을 내고 있음
- 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① **통합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
 - 정책목표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 연계하고, 도단위 통합적 정책 조정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함
 - ② **도와 시군의 통합적 사회적 경제 정책 전달체계를 정비**
 - 통합적 정책 전달은 기존의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고 역할을 강화하면서 시군단위에 중간지원조직을 확대해 나가야 함
 - ③ **사회적 경제에 우호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조달을 확대**
 - 정부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개선을 고려, 도/시군 등 공공기관의 공공·우선구매를 확대해 나가면서 일반소비 확대를 위한 착한소비 캠페인 등의 사회운동 추진해야 함
 - ④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연계한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사업전략을 개발**
 - 완주군 로컬푸드스테이션과 같이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계되어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영업을 도모하는 다양한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전략을 개발해야 함
 - ⑤ **생활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
 - 도내 대학에 사회적 경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초·중·등 학교교육에 사회적 경제 특성화 교육을 전격 도입해야 함



1.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요청은 1997년 이후 실업과 빈곤이 심화되면서 본격화되어 왔음

 - 국가차원에서 1996년 5개 자활지원센터 설립, 2003년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실행, 2007년 사회적 기업법 제정, 2010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등이 이어져 왔음
 - 반면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자리를 잡기보다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 전가 한다는 비판과 과도한 성과주의 혹은 수익위주 운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협동조합기본법(2012. 12. 시행)을 계기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 등에 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확산되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효율성을 추구하던 시장경제의 장기침체와 소득 양극화 문제를 국가와 사회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 협동조합기본법을 계기로 기존 시장에서 포괄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분야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의 자생력을 강화할 다양한 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지고 있음
-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관련 NPO를 사회적 경제의 실체로 파악하고, 시장과 정부실패의 대체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오고 있음

 - OECD는 국가와 시장의 중간에 있는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모든 조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NPO법인 재단·사단법인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포괄
 - 유럽위원회는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
 - 주로 시장과 정부실패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조직으로 새로운 내발적 성장과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사회적 경제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 새 정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나가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국정과제의 방향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정책을 개별 정책과제로 분산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충족을 위해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특징
- 국가차원의 아젠다로 제시되고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가는 사회적 경제를 통합적으로 재 인식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대응과제를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주요 도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이제는 개별 정책과 사업들을 사회적 경제로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 본 이슈브리핑은 전라북도 지역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대응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정책동향

(1) 사회적 경제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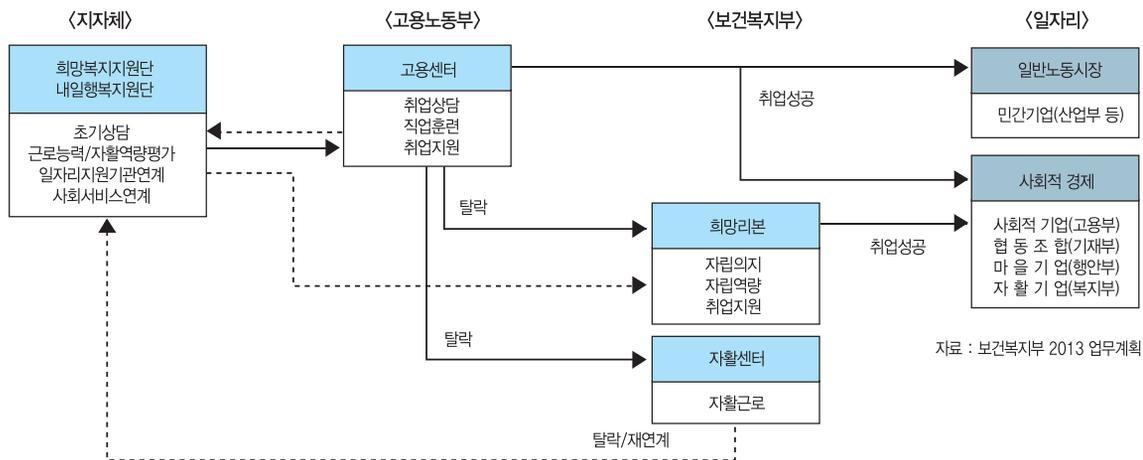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화폐적, 비화폐적인 자원을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의미함
 - 시장도 정부도 아닌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내부적으로 구성원 사이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음
 -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경제영역에서 사회적인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
-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여러 입장이 존재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관련 조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시민사회 영역이 경제적 주체가 되어 시장과 국가가 실패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관점이 병존함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조직¹⁾들이 부처별로 관리·육성되고 있으며, 부처별 선점경쟁도 이뤄지고 있음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은 2012년 1,7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2년말 현재 사회적기업 744개, 예비사회적기업 1,682개에 18,639명이 고용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5,333억원), 안전행정부 마을기업(2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7억원) 등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협동조합은 8개 개별 법률에 의해 농협, 신협 등이 개별 산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오다가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을 통해 확장되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5명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대부분 업종(금융업 제외)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69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 (2013년 3월말 현재)
 - 비영리단체 NPO와 관련해서는 민법에 의한 사단·재단법인(인가)과 비영리단체지원법(등록)이 있음
 - NPO 단체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단체지원법, 각 부처의 보조금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있으나 관련 통계가 부족한 실정임



1) 사회적 경제는 서민들 살고자 하는 노력과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선의를 경제적으로 조직화시킨 것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관련 NPO 등을 그 실체로 파악할 수 있음

(2) 사회적 경제 정책 동향

- 새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제출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정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관련 정책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활성화...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기존정책과 연계한 협동조합을 활용한 일자리·복지정책 등 개선
 -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익사업 수행 시 혜택부여
 - 사회적기업 활성화...고용노동부
 -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및 판로지원 확대
 - 청년의 사회적 기업 단계별 육성 프로젝트와 은퇴자의 사회적기업 취업·창업 지원
 - 유사 사회적기업 영역의 통합육성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마을기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안전행정부
 - 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 마을기업을 정책대상으로 설정
 -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과 다양한 주민 네트워크 거점 활성화
 -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 사업의 연계 및 융합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맞춤형 고용서비스 연계...보건복지부
 - 자활급여의 최저임금제 적용 등으로 일을 통한 소득보장 지원
 - 맞춤형 고용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연계 강화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고용센터에서, 취업 곤란자는 특화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업무계획

-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일자리, 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임
 - 사업이 부처단위로 추진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나,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실행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등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됨

3.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1) 사회적 경제 조직 개황

-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은 약 4천여개 조직으로 분석되었음
 -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회사, 농촌마을사업단, 농업생산자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협동 조직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음 (농협, 생협, 신협 등 기존 협동조합은 제외)²⁾

구분	조직수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108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예비기업)
마을기업	38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3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8
농촌마을사업조직	366	농림축산부/농촌진흥청/전라북도 (녹색농촌 72, 향토마을 64, 정보화 39, 건강장수 54, 전통테마 26, 산촌생태 51, 맛체험 10, 어촌체험 6, 마을종합 44)
농업생산자조직	2,486	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향토산업사업조직	33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사업단 20,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단 9, 농식품6차산업화 사업단 4)
자활공동체	260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지역자활센터 및 산하 사업단 등)
사업자조직	35	중소기업협동조합 35(수퍼마켓조합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전라북도 등록)	702	아동/청소년, 전통문화, 공예/미술, 연극/공연, 음악, 문학, 취약계층/장애인, 창업/소상공인, 노인복지, 다문화/노동, 귀농/농촌, 소비자/여성, 사회교육, 환경보호, 독서/도서관, 의료/보건, 역사/문화재 등 17개 영역으로 구분
합계	4,028개소	

주 : 사업지구가 중복되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는 조직이 있어 포함되지 않은 관련 조직 등이 있음 (2012. 8. 현재)

(2) 사회적 경제 조직별 현황

-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 조직은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108개의 사회적기업과 260여개의 자활공동체 사업조직이 활동 중
 - 사회적기업은 법률체계 상으로 다양한 법인격을 가지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체 인증을 받는 정책사업 대상
 - 자활공동체는 시군별로 1~3개소 이상이 지역자활센터로 운영 중이며, 자활센터 내에 다양한 형태의 사업단이 조직되어 활동 중
- 마을회사는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된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30개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8개소가 활동 중
 - 대부분 농어업법인, 마을조직의 형태를 띠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 방식으로 농특산물의 가공/체험/판매 및 농촌관광 등 복합형 사업을 수행 중
 - 마을회사는 신규조직 결성보다, 기존 마을공동체 조직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

2) 8개 개별 협동조합 법률에 의해 도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농협 95, 수협 4, 산림조합 13, 신협 74, 새마을금고 66, 소비자생협 26, 중기협동조합 35, 업연초조합 2 등 315개 조직이 활동 중

- 농촌마을 사업조직은 366개가 활동 중이며, 유형도 매우 다양한데, 대부분 주민참여형으로 농촌마을의 활력화를 꾀할 목적으로 활동 중
 - 주로 정부 부처의 정책사업 선정을 계기로 도농교류, 농촌체험, 직거래 등의 사업 및 활동을 전개
 - 많은 경우 인적역량이 부족하여 조직운영과 경영에 미숙한 점을 보여 마을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체 사업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향토산업 사업조직은 정부정책을 통해 지역의 농특산자원 등 다양한 향토자원을 활용, 상품화하는 공동 사업화 조직
 - 향토산업 사업단 20개소,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 9개소,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단 4개소 등이 있음
 - 정부정책 사업이 종료된 이후 자립적 경제활동 조직으로 발전해나가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농어업생산자조직의 대표적 형태로 영농(영어)조합법인을 들 수 있는데, 약 2,486여개소가 실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육성지원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농어업의 공동생산조직을 목적으로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설립된 형식적 조직이 많은 수를 차지
 - 최근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생산자 조직화의 대표적 실체로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1인 1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조직으로 702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 관련 성격을 띤 조직을 제외하고, 비영리 성격에 충실한 단체는 사업영역으로 대략 17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를 대변에서부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사업과 활동의 폭이 굉장히 넓음
- 이 밖에 개별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유통 및 판매활동을 대응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35개의 사업자 조직이 있음
 - 2006년 단체추수의계약 폐지로 협동조합 주도의 공공기관 납품이 어려워 상당부분 기능이 위축된 상태

4.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³⁾

- 조사대상 : 사회적 경제 조직을 6개 유형으로 구분, 표본조사(기존 협동조합 제외)
 - 농업생산자조직 122개, 비영리민간단체 25개, 사회적기업 94개, 자활관련조직 94개, 마을공동체조직 39개, 중소기업협동조합 18개 등 392개 조직
 - 관련분야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사업 및 활동력 등을 고려하여 표본선정⁴⁾
- 조사기간 및 방법
 - 2012년 9월10일~10월7일(24일간), 구조화된 조사표로 전문 조사원의 직접 방문 조사

3) 이 내용은 전북발전연구원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육성지원 정책 연구' 전라북도 수탁과제(2012)의 일부임

(1)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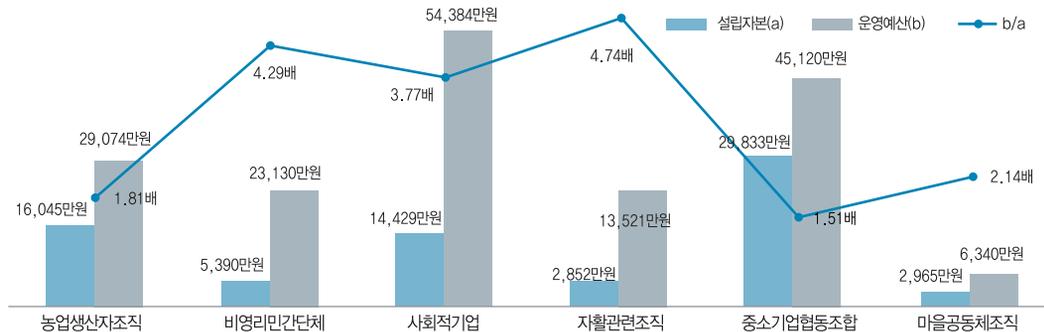
- 조직 당 임원은 평균 4.3명, 고용직원은 6.6명이었고, 비정규직 비율이 58.2%
 - 임원 대비 직원을 비교하면 자활관련조직(5.3배), 비영리민간단체(2.7배), 사회적기업(2.6배)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직원고용 시 우선기준은 취약계층(34.1%)과 지역주민(32.8%)이었으나, 비정규직(58.2%) 비율이 정규직(41.8%)보다 더 높음
 - 사회적 경제 전체 조직에 고용된 직원은 약 26,461명 수준으로 추정됨

(단위:명)

구분	평균 직원수	비율		평균 임원수
		정규직	비정규직	
농업생산자조직	4.9명	37.3%	62.7%	4.1명
비영리민간단체	12.8명	4.6%	76.5%	4.8명
사회적기업	17.7명	11.0%	38.7%	6.7명
자활관련조직	9.6명	1.6%	83.3%	1.8명
중소기업협동조합	4.3명	4.0%	7.7%	7.7명
마을공동체조직	1.9명	1.0%	69.7%	4.9명
전체	6.6명	41.8%	58.2%	10.7명

(2) 자본금 및 운영예산

- 조직별 설립 자본금은 평균 1.2억원이었고, 1년 운영예산은 평균 2.5억원 수준
 - 출자금과 운영예산을 비교하면 자활관련조직(4.7배), 사회적기업(3.8배), 비영리민간단체(2.8배) 등은 출자금에 비해 운영예산이 높음
 - 사회적 경제 조직 전체의 설립 자본금은 약 4,829억원, 1년 운영예산은 1조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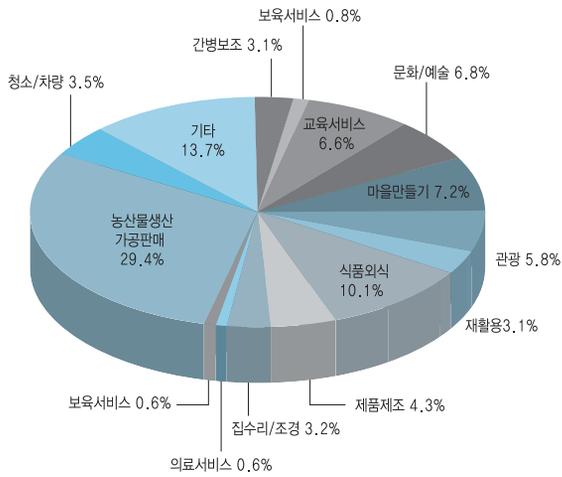


(3) 주요사업

- 사업은 조직유형에 따라 대별되기보다 조직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 (복수응답)
 - 농업생산자조직은 농축산물 생산·가공·판매, 식품제조·외식 분야의 비중이 높음
 - 비영리민간단체는 문화·예술활동, 교육서비스 분야에서의 사업비중이 높음

4) 조사대상은 조직의 사업, 활동력, 조직구성 등을 기준으로 농업생산자조직·마을공동체조직은 상위 5% 수준, 비영리민간단체는 상위 10% 수준, 자활관련조직·사회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은 평균 수준에서 선정하였고, 조사설계에 의한 모집단 전체 값을 추정하였음

- 사회적기업은 농축산물 생산·가공·판매, 교육서비스, 식품제조·외식 비중이 큼
- 자활관련조직은 농축산물 생산·가공·판매, 식품제조·외식, 재활용품생산 비중이 큼
- 마을공동체조직은 농축산물 생산·가공·판매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농촌관광이 결합



구분	농업생산자조직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자활관련조직	마을공동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
간병/생활보호서비스	-	7.5%	4.2%	7.8%	-	-
보육서비스	-	-	1.2%	2.6%	-	-
교육서비스	4.8%	22.5%	12.0%	0.9%	5.5%	13.0%
문화/예술활동	0.6%	45.0%	9.0%	0.9%	5.5%	4.3%
마을만들기	4.2%	2.5%	5.4%	-	25.7%	-
농촌관광	3.0%	7.5%	6.6%	0.9%	12.8%	8.7%
재활용품생산	-	-	4.8%	9.5%	-	-
식품제조/외식	11.3%	2.5%	11.4%	11.2%	10.1%	-
일반제품제조	1.8%	-	7.2%	4.3%	1.8%	21.7%
집수리/조경	1.2%	-	3.0%	11.2%	-	-
보건의료서비스	-	-	1.8%	0.9%	-	-
택배서비스	1.8%	-	-	1.7%	-	-
농축산물생산/가공/판매	63.1%	-	16.3%	19.0%	24.8%	4.3%
청소/차량관리	0.6%	2.5%	4.8%	10.3%	-	-
기타	7.7%	10.0%	12.0%	19.0%	13.8%	47.8%

(4) 원재료 구입 및 상품/서비스 판매

- 원재료는 89.4%를 도내에서 조달하고, 생산된 상품/서비스는 69.1%를 도내에 판매
 - 원재료의 경우 마을공동체조직(73.5%)과 농업생산자조직(30.4%)은 생활경제권 단위인 읍면동에서 조달하고 있음
 - 상품/서비스의 주 판매처를 해당 시군으로 하는 조직은 자활관련조직(81.5%), 비영리민간단체(73.7%)로 이들 조직은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깊은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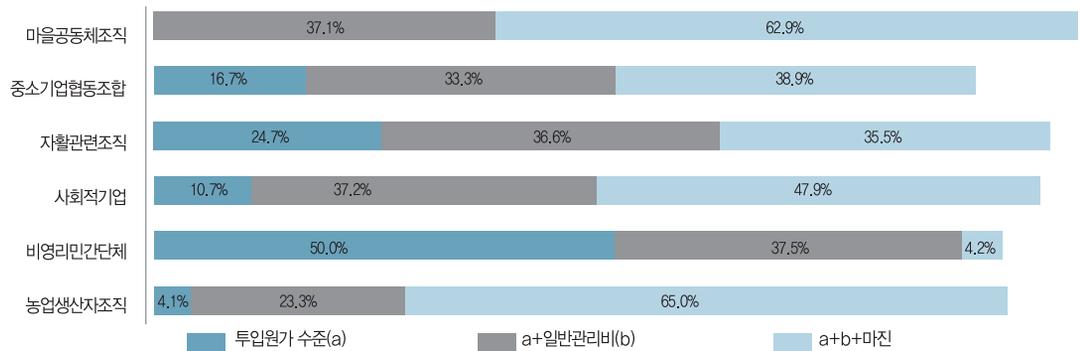
조직명	〈원재료 구입처〉 (단위:%)					〈상품 및 서비스 판매처〉 (단위:%)				
	비중	해당 읍면동	비중	해당 시군	비중	해당 읍면동	비중	해당 시군	비중	
마을공동체조직	73.5	해당 읍면동	8.4	9.6	5.5	10.7	17.3	17.6	40.4	수도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8.5	17.4	55.9	도내 타시군	18.2, 도외	5.8	22.8	54.4	도내 타시군	15.2
자활관련조직	25.8%	58.2	해당 시군	9.4	4.5	22.3, 해당 읍면동	59.2	해당 시군	14.0	4.4
사회적기업	17.8	51.8	14.8	14.3	8.1	44.4	해당 시군	19.9	24.8	
비영리민간단체	7.0	74.3	해당 시군	14.8	3.8	6.3	67.4	해당 시군	17.2	6.5
농업생산자조직	30.4	45.3	12.5	6.8	8.5	16.7	21.0	47.4	수도권 등	

- 상품/서비스의 판매방식은 일반판매 비중이 공공판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음
 - 공공판매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은 조직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이들 조직은 공공영역과의 관계가 높음

구 분	농업생산자조직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자활관련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	마을공동체조직	전 체
일반판매	60.6%	38.0%	62.9%	68.2%	42.2%	52.7%	60.1%
공공판매	34.5%	60.7%	30.9%	25.3%	57.5%	33.0%	33.8%
기 타	4.9%	1.4%	6.2%	6.5%	0.3%	8.9%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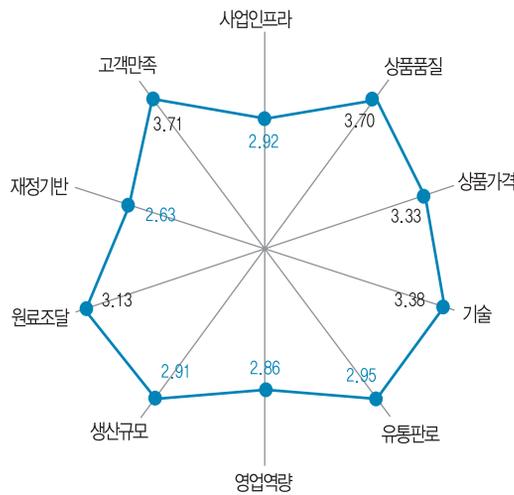
(5) 상품/서비스 가격 결정

-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은 32.6%의 조직이 일반관리비 수준에서 결정
 - 마진수준(+투입원가+일반관리비)에서는 48.3%의 조직이 결정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의 50%는 투입원가수준에서 가격을 결정
 - 이러한 가격은 시장 내 유사 상품/서비스 가격에 견주어 저렴한 것으로 평가됨



(6) 상품/서비스 경쟁력 평가

-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⁵⁾은 제품품질, 가격, 기술, 고객만족 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취약분야는 재정기반, 영업역량, 생산규모, 사업인프라, 유통판로 등의 순으로 평가
 - 비영리민간단체, 자활관련조직, 마을공동체조직 등의 경쟁력은 타 조직에 비해 낮음



구 분	농업 조직	민간 단체	사회적 기업	자활 조직	중기 조합	마을 조직
인 프 라	보통	부족	보통	미흡	부족	미흡
품 질	우수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우수
가 격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우수	보통
기 술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보통
유통판로	보통	미흡	보통	미흡	보통	부족
영업역량	부족	부족	보통	미흡	보통	미흡
생산규모	보통	취약	부족	미흡	보통	부족
원료조달	보통	미흡	보통	부족	보통	보통
재정기반	미흡	취약	미흡	미흡	보통	미흡
고객만족	우수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전 체	보통	부족	보통	부족	보통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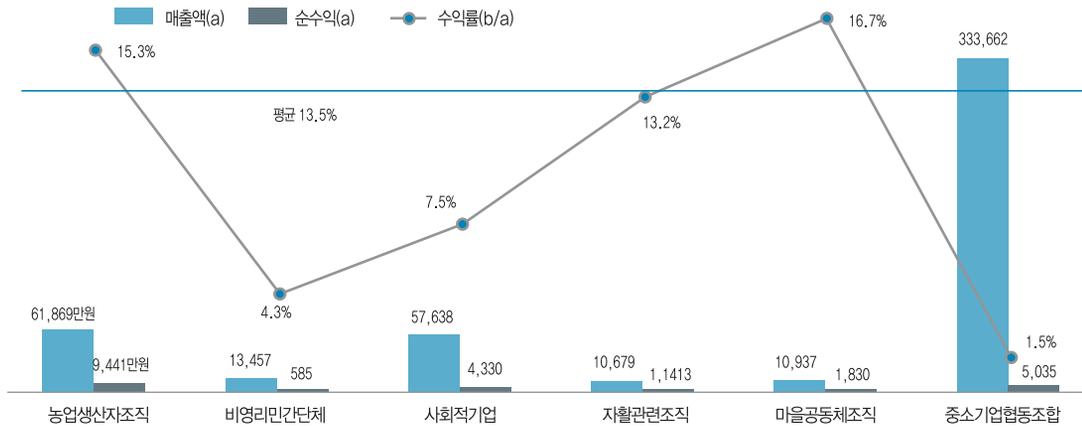
• 주 : 우수(3.5이상), 보통(3.0~3.5미만), 부족(3.0미만~2.80이상), 미흡(2.8 미만~2.50이상), 취약(2.5 미만)

• 주 :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 1(전혀 아니다)~3(보통이다)~5(매우 그렇다)

5) 상품/서비스 경쟁력은 사업인프라, 제품품질, 가격, 기술, 유통판로, 영업역량, 생산규모, 원료조달, 재정기반, 고객만족 등 10개 영역으로 측정하여 평가

(7) 매출액 및 순수익

- 조직 당 1년 매출액은 평균 6억 6,152만원이었고, 순수익은 6,386만원 수준
 - 매출액 대비 순수익으로 추정된 이익률은 평균 13.5%이었고, 농업생산자조직, 마을공동체 조직은 평균 이상이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5%로 저조한 수준
 - 사회적 경제 조직 전체의 1년간 매출액은 약 1조 8,866억원, 순수익은 약 2,569억원으로 추정



(8) 실태분석 요약

- 이상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조사 결과를 전라북도 경제수준⁶⁾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음
 - 도내 사회적 경제 분야의 4천여개 조직은 도내 경제활동 사업체 12.5만개의 약 3.2% 수준

구 분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a)		전라북도 경제 현황	
		(a/b)		현황(b)
조직 수	4,028여개	3.2%	사업체 수	12.5만개
고용 직원 (추정)	26,460여명	4.7%	사업체 종사자 수	56.6만명
매출액 (추정)	1조 8,866억원	1.8%	사업체 매출액	102.5조원
순수익 (추정)	2,569억원	2.4%	사업체 영업이익	10.8조원
수익률 (추정)	13.5%	127.4%	사업체 영업이익률	10.6%
초기 출자금 (추정)	4,829억원	-	-	-
운영 예산 (추정)	1조 218억원	-	-	-
원재료 조달처	도내 89.4%, 도외 10.6%	-	-	-
상품·서비스 판매처	도내 69.1%, 도외 30.9%	-	-	-
매출액 구성비	공공판매 33.8%, 일반판매 60.1%	-	-	-
상품·서비스 장점	품질, 가격, 사회적 신뢰	-	-	-
상품·서비스 약점	홍보·마케팅, 자본력, 인적자원	-	-	-

주 1. 비교하는 전라북도 수치는 2010년말 기준 주 2. (추정)은 조사설계에 의해 모집단 값의 추정치이며, 나머지는 실제 조사값

6) 전라북도 경제총 조사, 5년 주기의 개별 사업체 전수조사,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의 구조를 파악

- 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은 도내 사업체 종사자의 4.7% 수준
 - 사회적 경제 조직 종사자 26,461명(추정)은 도내 사업체 종사자 56.6만명의 약 4.7% 수준이며, 이중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58.2%)을 차지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 내 고용을 우선하면서 지역 내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생산된 상품/서비스를 지역 내 판매를 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며, 도내에서 원재료의 89.4%를 조달하고 상품/서비스의 69.1%를 판매하지만, 공공판매는 33.8% 수준에 그침
- 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 전체의 매출액은 도내 사업체의 1.8% 수준 규모
 - 전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간 매출액 약 1.8조원(추정)은 도내 사업체 매출액 102.5조원의 1.8% 수준, 이들 조직의 이익률(13.5%)은 도내 사업체 영업이익률(10.6%)보다 높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강점은 품질, 가격, 사회적 신뢰로 평가
 -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강점요인은 품질, 가격, 사회적 신뢰이었으며, 약점요인으로는 홍보·마케팅, 자본력, 인적자원이 지적
- 개별 조직으로는 규모와 활동이 미약할 수 있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 전체로는 지역경제에서 의미있는 위치를 차지하며 지역순환경제를 실천하고 있음

5.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향과 과제

(1) 통합적 사회적 경제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설정

- 정부차원에서는 통합적 사회적 경제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부처별 사업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실행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지역적 대응이 필요함
- 최근 출범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통합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을 준비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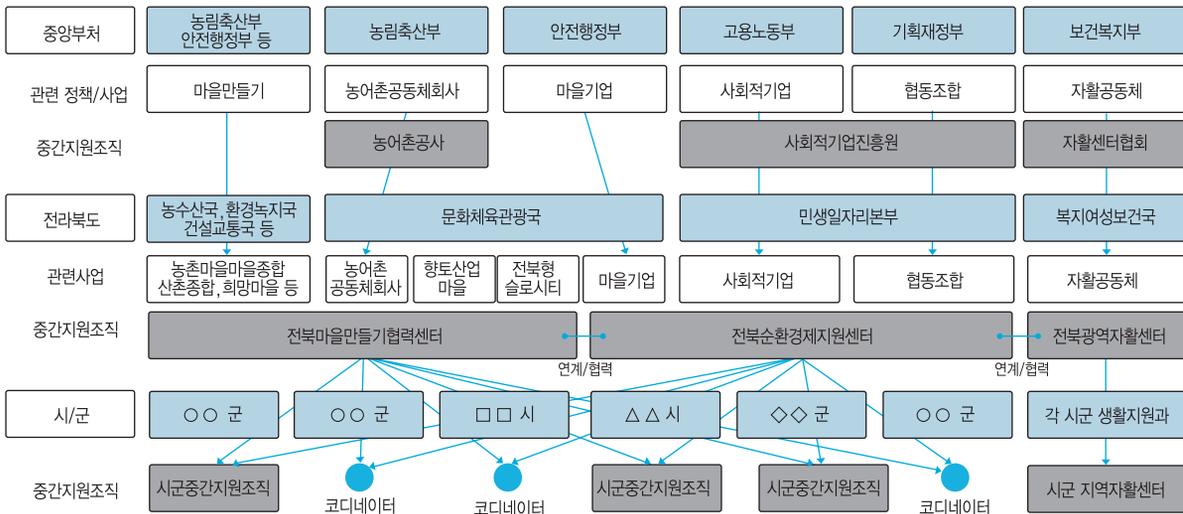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년 3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재생 등 지역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완주군, 성북구 등 30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모여 결성. 사회책임조달제도 및 사회적 경제 정책방향 확산을 위한 정책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 (협의회장 : 완주군수)

- 정부 부처별 정책 실행 계통에 따라 국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도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방향 검토가 요구됨
- 정책목표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임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공동체+농어촌공동체회사+마을만들기+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사업의 성격을 갖는 사업(정책) 간의 연계가 필요
- 이를 위해 행정 내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정책조정기구) 설치가 필요

(2) 도와 시군의 통합적 사회적 경제 정책 전달체계를 정비

- 통합적 사회적 경제 정책 전달체계 정비의 핵심은 도와 시군단위에서 관련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인가에 있음
- 정부 부처별 집행체계가 지방행정 단위에 그대로 투영되는 현실을 볼 때, 결국 도와 시군단위에 중간 지원조직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가 핵심과제로 제기됨
 -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사례
 - 완주군은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사업을 통합한 중간지원 방식으로 주민에게 전달하고 관리하고 있음
 - 반면 대부분의 시군은 중간지원조직 없이 행정을 통해 관련 정책이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어 사업간 연계는 물론 사후관리도 미흡한 실정
- 전라북도의 중간지원조직 여건을 고려할 때,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은 기존의 광역 중간 지원조직(지역순환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협력센터)이 협력과 역할을 강화하면서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추가 설치가 요구됨
 - ※ 시군 중간지원조직 현황 : 완주군, 진안군, 정읍시, 임실군(예정)
- 한편 시군단위에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기 어려운 지역은 광역 중간지원조직에서 육성되어 파견하는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을 검토 (사례 :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자활공동체사업은 중간지원조직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 분야와의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감 (보건복지부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모형)



자료 : 임경수(2013)

(3) 사회적 경제에 우호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조달을 확대

- 사회적 경제 조직에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 조달을 사회적 책임조달의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상품/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12월)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자체도 자체시책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음
 - ※ 정부의 사회적 경제 조직 공공구매 확대 계획
 - 기획재정부 : 공공부문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공공기관의 장은 전년 구매실적, 당년 구매계획을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 공고)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공공구매 지원센터 설치 등 판로지원 확대 예정
 - ※ 지자체의 공공구매 활성화 사례
 - 서울시 성북구 :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구매의 활성화를 도모
 - 경기도 성남시 : 시민 주주기업에게 공공구매 또는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시 평가점수에 가점을 주어 우호적 시장을 조성
- 전라북도와 시군의 공공기관이 공공구매와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정책환경을 조성 (우선구매 조례제정, 참여조직 확대,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 또한 일반소비 확대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이른바 착한소비의 지속적 홍보사업과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1사 1사회적 기업 등을 연계하는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4) 사회적 경제 조직을 연계하는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사업전략 개발

- 현재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주류 시장경제의 가치사슬에 편승하지 못하고 개별 조직으로 분산되어 경제활동 전개가 어려운 실정임
-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하나의 단위로 통합된 사업집단(business group)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른바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전략임
-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경제활동 소요비용을 절감하는 목표가 더욱 중요함
- 따라서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전략과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을 연결하는 구심체를 형성해 나가야 함
 - ※ 사회적 경제 조직 연계 조직화 사례
 - 완주군은 협동조합 등이 중심이 되어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기업 등의 개별 사업조직을 로컬푸드스테이션(매장)을 거점으로 한 거래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체별 지속 경영을 도모하고 있음
- 지역사회는 구조적으로 쉽게 시장이 실패하거나 시장 부재(missing)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영역이 지역통합형 경제활동을 조직하여 개별 조직을 연계해 나가는 전략사업의 영역이 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의 위축된 경제활동을 복원하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영역 : 성장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옥구(돌봄, 환경, 친환경, 자원재생 등) 또는 복지·일자리·농촌서비스 등 부재시장 영역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의 상품·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판매·홍보·교육·인큐베이팅 등

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복합센터(전용물)' 을 상징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제안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5) 생활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 정부는 부처(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별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에 관한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확대 추진해나갈 방침
 - ※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정책 방향
 - 협동조합은 일반교육 확대와 대학원 강좌 개설 등이 주요내용이며, 사회적기업은 초중등 교과과정 반영, 대학·대학원 과목 개설, 대학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 주요내용
-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국가와 사회적 관심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시민권을 얻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의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는 캠페인은 물론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도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전문교육과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적 경제 대학원 과정' 을 선도적으로 개설
 - ※ 사회적 경제 대학원은 성공회대학교에 유일하게 개설. 사회적 경제 대학원 과정은 도내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초중등 학교교육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특성화 교육을 관련주체(전라북도, 도교육청,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가 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교재개발(2013년 상반기)→교사교육(2013년 하반기)→시범실시(2014년)→교육확대(2015년)
 - ※ 외국의 사회적 경제 교육사례
 - 영국(옥스퍼드대학)과 미국(하버드/스텐퍼드대학)의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교육 시스템, 영국 캐머런 정부의 청소년 교육 및 지역커뮤니티 활동가 양성 정책, 이탈리아의 협동교육 등을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참고자료

- 김기태, 새정부 협동사회경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계간 협동조합네트워크 60,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3.
- 이인우,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지역협동조합의 실천과제, 전북협동사회연대회(준) 1차 포럼 발표자료, 2012.
- 임경수, 전라북도 중간지원조직의 광역·시군간 역할분담 및 발전방향,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2013.
- 전북발전연구원, 새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적경제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문가 세미나, 2013.
- 전북발전연구원,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육성지원 정책 연구, 전라북도, 2012.
- 황영모, 협동조합 기본법과 농촌사회의 대응과제, 한국농촌사회학회 심포지엄 발표자료, 2012.